민주 광주시장 경선 시민배심원제 도입 진통 왜

후보들 유·불리따라 첨예대립

주류·비주류 갈등으로 확전 조짐

민심 반영폭 확대 합의점 찾아야

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이견 등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둘러싼 광주시장 후보들의 셈법이 각기 다른데다 민주당 주류-비주류 간의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묘한 셈법**=일단 민주당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주시장 경선에서 혁신적 공천방법인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 평가 점수를 50%, 당원 전수조사 50%의 조합방식을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1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은 처한 입장에 따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운태 의원 등 여론조사 선두그룹에서는 당원을 제외한 광주시민이 고작 100명만이 참여하는 1안에 대해 불만이다.

광주시민의 의사가 경선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당심과 민심이 부합하는 후보가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이용섭 의원 등 여론조사에서 중위권을 달리는 후보군에서는 시민배심원제가 낮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 2안으로 시민배심원제를 컷-오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여론조사 선두권에 있는 후보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시민배심원 투표가 1인 2표제의 배제투표라는 점에서 특정 투표 성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컷-오프 결과에 따른 중위권 후보들의 이합집산도 부담이다.

반면 여론조사 중위권 후보군에서는 시민배심원제 컷-오프 방식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선두 후보 가운데 1명 정도는 탈락되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타내고 있다.

선두 후보가 탈락하지 않는다면 시민배심원제의 도입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류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합의점 도출되나**=현재로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은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완전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당헌과 당규에 위배된다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민 및 전문 배심원과 당원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중치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광주 민심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특히,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둘러싸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세균 대표 측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정동영 의원 등 비주류에서는 국민참여 경선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광주시장 경선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수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는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되 50%를 반영하기 보다는 30% 비율로 내리고 당원 전수조사 비율도 40% 정도로 조정, 광주시민의 참여를 30% 정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한 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남구·여수시 시민배심원제 도입되면

기존 경선 판도 뒤흔들 가능성

여론조사 1위 현직 후보 불리

민주당 주류 측에서 광주시 남구와 여수지역에 대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 임실·정읍 등 전북 2곳, 남구 등 광주 1곳, 여수 등 전남 1곳을 비롯, 서울 2곳, 인천 1곳, 충북 1곳 등 9곳을 전략지역으로 분류, 시민공천배심원제를 100%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지역을 막판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주류 측에서는 특정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주류 측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문제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경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기존 여론조사 1위 후보라도 흠결이 있는 경우는 탈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반대로 인지도가 낮아서 현역에 뒤지고 있는 후보라도 개혁성과 참신성을 무기로 후보를 거머쥘 가능성도 있다.

광주 남구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황일봉 남구청장에 10여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 상황. 황 청장의 지지도가 다른 후보를 압도하지 못해 군소후보들의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다. 따라서 남구에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심원제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황 청장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반면, 시민운동을 해오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오피니언그룹에게 좋은 평을 받아온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여수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은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배심원단보다 현지배심원의 비율을 50% 늘리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열세를 보이고 있는 김강식·김재철·배성기 후보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오현섭 시장 등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며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오현섭 시장은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기존 판도를 흔들어 공천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계의 두 국회의원과 민주계의 오 시장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의혹을 키우는 상황이다. 민주계에서는 그나마 몇명 있는 민주계를 열린우리계가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계의 의혹 제기는 우려라는 시각도 있다. 시민배심원에서 이 같은 정치적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욱이 현지 배심원의 비율을 늘린 것은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 지지도 차이가 2~3배 나는 경우에 1위 후보를 탈락시키거나 10% 미만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하기는 시민배심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U대회 성공 우리가" 광주 서구청은 2일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서구 범 시민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

민주 지방선거 386세대가 주도

공심위·통합혁신위 등 다수 포진 영향력 확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386 세대가 맹활약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당 공심위에는 386 세대는 오영식 간사를 비롯, 조정식, 강기정, 이인영, 지용호 위원 등이 포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세균 대표 체제에서 386 세대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의 밑그림을 짜는 기획본부장은 김민석 전 의원이다. 또한, 야권과의 선거 연대 및 단일화 협상은 윤호중 전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경선 룰을 마련하는 당 통합혁신위원회는 최재성 의원이 이끌고 있다. 당의 핵심전략을 수행하는 이들이 모두 1980년대 학번들이다.

386세대는 지방선거 전면에도 나설 예정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송영길 최고위원(인천), 이광재 의원(강원), 안희정 최고위원(충남) 등이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부천시장 후보) 등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386세대들도 상당하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들

위원	직책	경력
이미경(60)	당 사무총장	노무현후보 선대위 대변인
오영식(45)	전의원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손학규 대표 시절)
유인태(62)	당무위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낙균(69)	현의원	민주당 최고위원회(DJ정부)
우윤근(53)	원내 수석부대표	전 정동영 당의장 특보
최철국(58)	경남도당위원장	전 원내 부대표
박선숙(50)	현의원	청와대 공보수석(DJ정부)
조정식(47)	현의원	전 원내 부대표
강기정(46)	현의원	전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
이인영(46)	전의원	한반도재단 동북아연구소장
지용호(45)	당 청년위의장	제2건국위 팀장(DJ정부)
김상희(56)	현의원	비례대표(여성몫)

※외부인사인 장하진 전 여성부장관, 김수진(이화여대 경영학)·유재일(대전대 정치교학) 교수는 제외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대교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